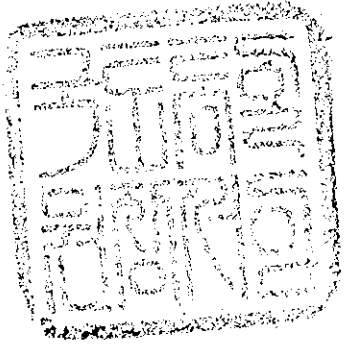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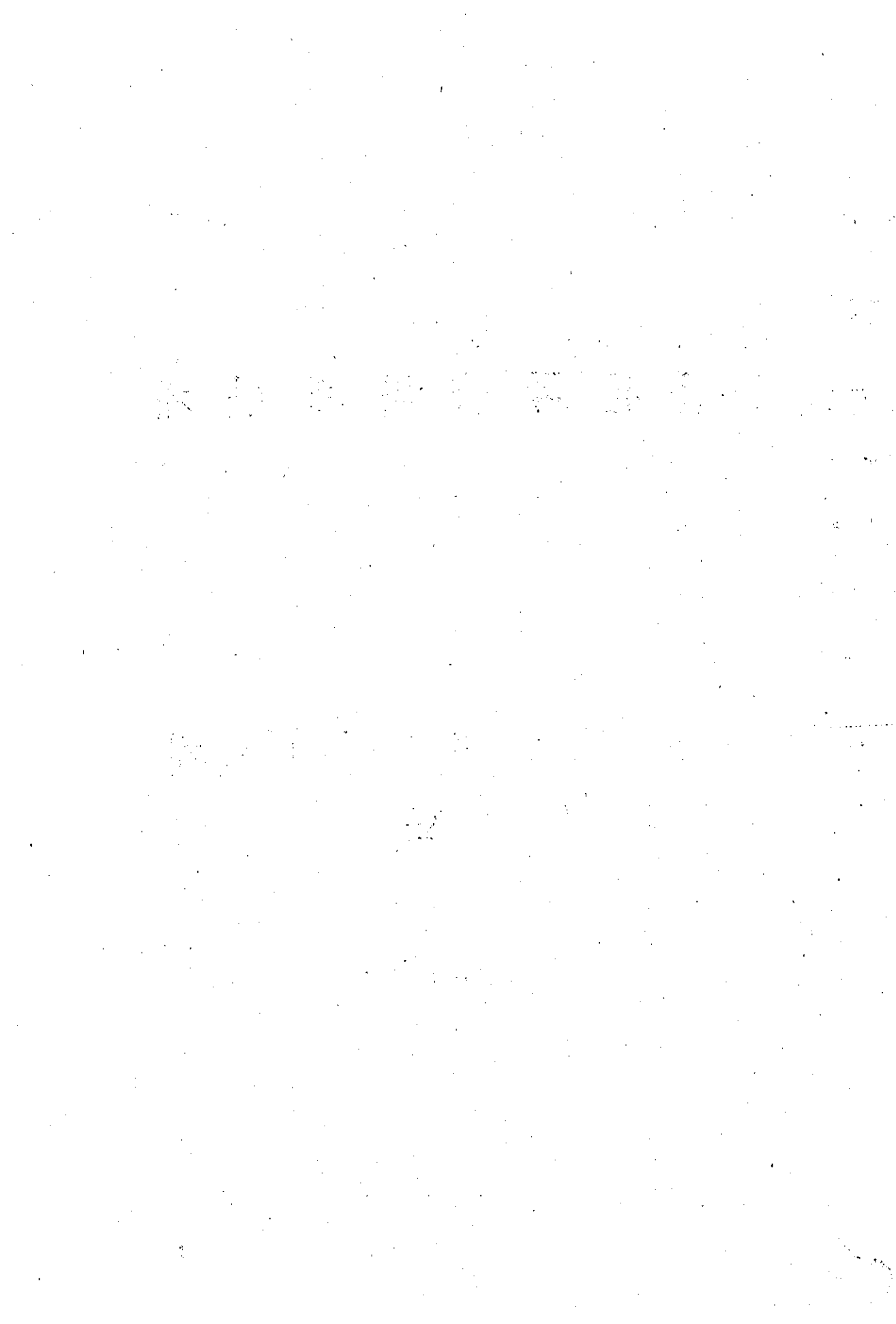


일본국방의 새 단계



1969. 12



일본 「국방」의 새 단계

목 차

1 . 서 론	1
2 . 일본방위의 기본방침	3
3 . 최초 「국방백서」의 내용	7
4 . 제 4차 방위계획과 오기나와 방위문제	13
5 . 「향토방위대」구상	16
6 . 결 론	18

일본 「국방」의 새 단계

1. 서론

전후의 일본은 헌법상 「육·해·공군 또는 기타 전력을 확보치 않으며 국가 교전권(交戰權)을 승인치 않는다」 또 「국력을 발동하는 전쟁,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로 국제분규를 해결하는 수단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공정권이 출현하고 1950년 발생한 한국동란과 소련군 시베리아 주둔은 일본안전에 위협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51년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일본의 「자위대」는 사실상 필요에 따라 1953년에 조직되어 10여년 내려오는 동안 현대화된 「국방군」이 되었다. 그러나 25만미만에 육·해·공군으로는 외래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유지할수는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1967년 사토수상은 미국 존슨 대통령과 2차 회담후 「자기의 국가는 자기 역량으로 방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후로 여당과 정부내외 및 재정계 인사들도 「자주방위」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방위청 장관은 「적극방위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금년 7월 국회에서는 방위역량강화를 위한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을 통과하였고 유도탄과 켄트기등 현대화된 무기생산을 결정하였다. 이에 뒤를 이어 발표된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장의 「백만향토 방위대」구상은 일본의 「자주방위론」을 구체화 하였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자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을 보

지하기란 극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8년도 국민 총생산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신영에서 더욱이 아주에서 이미 가볍지 않는 중요한 지위에 올라 섰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일본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보지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 할수 있는 국방력의 강화를 전 국민은 상하를 막론하고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 방위청은 제 1차 「국방백서」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요한 목적은 원동지역의 군사정세와 일본 금후의 방위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의 「국방의식」을 제고하여 「국방계획」의 추진을 촉구시켜 일본국방을 새로운 단계에 돌입시키는데 있다.

본 내용은 일본 「자주국방」의 구상을 소개한 것으로 그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2. 일본방위의 기본방침

일본의 방위방향은 1957년 5월 국회에서 결정된 「국방기초 방침의 추진」을 근거하고 있다. 본 기본방침 제2항에 「민생의 안전과 애국심의 제고로 국가 안전의 기초를 확고히 보장한다」라 하였고 제3항에는 「국가의 역량과 국가 정세를 고려하여 국가자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방위역량을 단계별로 간성시킨다」고 되어 있다. 이상 2항의 기본방침의 내용에서 일본의 방위구상은 국민에게 「국방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후 사라져가는 애국심을 제고하고 전쟁의 원함과 전쟁의 두려움 및 대외 의존심을 버리고 국가 안전보장의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또수상이 강조한 「자기 나라는 자기의 역량으로 방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이 구상에 대한 지침이 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현 헌법제도하에서 국민에게 국방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선 「민생안정」 후 「방위력강화」를 조심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의 기본구상은 제2, 3차 방위계획에 잘 반영되었다.

1958년에서 1960년까지의 제1차 「방위 3개년계획」에 「국력과 국가정세의 따라 최소한도의 자주방위계획을 책정한다」 또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경제안전을 유의한다. 특히 매년도 방위 예산책정은 국가제정과 민생안정을 고려하여 탄력성있게 결정한다」고 방위계획을 명시하였고, 1962년에서 1966년까지의 제2

차 「방위 5개년 계획」에는 「.....1961년 이미 완성된 기본 방위역량을 충실히 하고 재 배양함과 동시에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하여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단 본(제2차) 계획에서도 제1차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경제사정과 민생안정 및 기타 일반 시책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의 제3차 「방위 5개년 계획」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특별히 방위목표와 방위력 강화에 현저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제3차 계획중에는 「침략을 제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방위역량을 갖춘다」 또 「무력적 국부침략을 제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준비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제 1, 2, 3차 계획의 구상과 목표는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인 강화의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침략전쟁을 방비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지를 못하였다. 어디까지나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방위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본 방위청이 발표한 「국방백서」(註1)는 아시아 정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동과 동남아지구는 동서양진영의 접촉지대이자 국토분할문제, 영토문제, 종교문제등의 복잡한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중공과 북한은 대외적으로 강경자세를 취하면서 계속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이외에 동남아에서의 영군의 철수는 소련세력의 아주 침투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의 정세는 전쟁물파의 가능성을 날로 증
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시급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에 그리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수년내 즉
1962년에서 1965년 까지의 4년간 부담액은 매년 총생산액의
1.0%에 불과했고 1966년에는 0.5% 1967년이 0.8%
1968년이 0.9%에 불과하였다. (註2)

현재 세계 주요국가방위 부담률은 미국이 9.8% 소련이 9.6
% 영국이 5.7% 불란서가 5.3% 서독이 4.3% 이탈리아
2.9% 화란이 4.0% 동독이 3.7% 헝가리가 2.6% 체코가
5.6% 유고슬라비아가 4.7%로서 일본과 비교하여 수배에 달하
고 있다. 또 중립국중 스웨덴이 3.9% 스위치랜드가 2.4%이
며 스웨덴의 국민 총생산은 일본의 5분의1에 불과하나 방위에
지출은 일본과 같다.

아주국가를 보더라도 중공이 9.2% 한국이 3.9% 비올빈이
1.7% 호주가 4.9% 인도가 3.3% 태국이 2.5% 월남
이 8.8% 라오스가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 각국을
보면 토이기가 4.6% 이락, 요르단, 이스라엘등이 12%를 차지하
고 있다.

이상 각국의 방위 부담률을 보면 일본의 1.0% 좌우의 부담
률은 극히 가벼운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의 집계에 의하면 일
본이 방위비 부담을 국민 총생산의 2.0%를 초과치 않는한 「민

생산정」과 「경제성장」에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보수정부가 「자주방위」를 강력히 강조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3. 제1차 「국방백서」의 내용

일본정부는 정부의 시정을 국민에게 PR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백서」라는 일종의 보고식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무성은 「외교백서」 농림성은 「농림백서」 통산성은 「무역백서」 경제기획청은 「경제백서」가 있다. 그러나 방위청은 지금까지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비로소 제1차로 「국방백서」를 발간케 되었다. 일본에서 발령되는 「조일신문」은 방위청이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자주방위」의 추진을 국민에게 이해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백서는 총론과 각론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론은 117페이지로 되었고 각론은 335페이지 중 450페이지로 된 저작이다. 「朝日新聞」은 지난 9월 17일 총론과 관계있는 부분의 요점을 기재 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백서의 내용은

첫째 ;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필요성

둘째 ; 일본방위의 기본구상

셋째 ; 일본의 방위력

넷째 ; 자위대

다섯째 ; 미·일안보체제

등 5부분으로 되었고 각 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필요성에서는 먼저 원동의 군사정세와 대원동지구 동서 양진영의 병력 배비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는 가운데 공산진영의 병력 특히 지상군 잠수함, 비행기등이 압도적으

로 우세한 위치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공은 육군을 주력으로 약 150개사단 2백50만명을 가지고 있고 이외 보안대와 국경 경비대를 합치면 28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선박은 약 9백척 약 20만톤 그중 잠수함이 33척이다. 해병대는 약 2만8천명이고 공군은 2,5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나 거의 구식 전투기이다. 핵무기는 1964년에 제1차 실험을 한 이래 지금까지 8차례 걸쳐 실험한바 있다. 유도탄은 금명연중에 발사 예정이라 한다. 중공의 핵병력이 비록 미국의 비하에 약하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소련은 (1968년도 집계) 322만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다. 그중 육군이 200만으로서 140개 사단이 있다. 원동에 배치된 병력은 17개사단 약 24만명에 달하고 있다. 해군은 세계 제2위로서 보통잠수함 330척과 핵동력 잠수함 약 50척을 가지고 있다. 원동에 배치된 함정은 약 600척으로서 약 60만톤에 달하며 그중 잠수함이 100여척 된다. 공군은 비행기 1만250대를 가지고 있다. 그중 원동에 파견된 것이 약 2천에 달한다. 이외 전략상 유도탄부대 약 5만명이 소련 서부 남부 및 동부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서구·일본·중공이 이 전략 북포내에 참여 있다.

소련의 함정과 비행기는 늘 일본근해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 일년동안에 4백여차 소련 비행기를 비롯하여 정체 불명의 비행기가 영공을 침범하였고 최근에 와서 날로 수가 늘어 가고 있

다.

북괴의 육군은 약 35만으로서 19개 사단을 가지고 있고 해군함정은 약 180척으로 약 만 5천톤에 달하고 공군은 600여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북괴의 총병력은 약 38만에 달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가까운 공산국가들이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별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우수관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일본은 국방기본방침에 비록 「연합국의 결의를 지지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세계평화를 실현한다」(제1항)고 하였으나 일본이라고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 독립국가가 자기의 영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는다는 것은 침략방위라는 의미 이외에 국제적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제평화 유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2장 「일본방위의 기본구상」에는 일본이 「중립정책」과 「동맹 불체결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일본이 「중립」 또는 「동맹 불체결정책」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근 국가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어떤나라가 상대국의 무력적 침략을 받았을 경우 독자적인 힘으로 이를 저항하여 이를

의할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핵보유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단독으로 이에 저항할 방법 또한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지형상 전략상 중립은 유지할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 일본은 모든면에 동서 양진영의 접촉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서간 평형작용의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서방진영에서 이탈하여 중립을 보수한다면 동서간의 균형은 파괴될 것이며 원동 나아가 세계평화에 주는 영향이 크다.

셋째 ; 일본이 만약 중립정책을 취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방위력이 필요하다. 중립국이라고 비무장국가는 아닌 것이다. 만약 일본이 무장한 중립을 실시한다면 방위비 부담은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며 이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클 것이다.

네째 ; 일본은 해안국가이자 인구에 비하여 땅이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일본의 대외무역은 자유국가중 9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내피무역 역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중립노선을 걷게 된다면 이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제 3장의 「일본방위력」과 제 4장의 「자위대」에서는 일본이 「간접침략」과 「외래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상하여 이때 어떠한 방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일본은 그 지리적 조건, 국내 각종 반대투쟁 세력, 외래의 어떤 착용으로 인한 내부의 불안으로 외래의 무력 침공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천재, 인화, 경제혼란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간접침략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를 방위청은 다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어업분규, 령공침입 및 령해사건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충돌
둘째;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여러가지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과 미일안전조약에 의거 일본을 방위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의 타국간의 충돌이 전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구상과 가설하에서 일본은 미일안보체제를 방위정책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 5장에는 금후 일본의 방위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은 전략수세(戰略守勢)를 기본으로 하여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전쟁(屬地戰爭) 이하 규모의 전쟁에 저항할만한 방위능력을 보지한다.

둘째; 전략공격 또는 전략적 전술적 핵공격에 대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방위청은 일본이 침략을 받는 순간에 방위는 일본자신이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방위 계획에 있어서 하기 3점을 최소한도 구비한후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 육상방위상 미국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적의 침략을 방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둘째 ; 해상방위는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해상 운수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 공중방위는 점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제 4차 방위계획과 오끼나와 방위문제

1972년에서 1976년까지의 제 4차 방위 5개년 계획은 방위청이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립은 지난 10월 14일 방위청 장관이 방위청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 3) 그 기본계획과 중점은 아래 몇가지로 귀납시킬 수 있다.

첫째, 기본계획은 바로 「재래식무기국지 전쟁에 저항할 수 있는 방위체제 수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방위와 금후 10년 내에 방위력 충실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중점은 다음 6개항목으로 되어 있다.

(1) 오끼나와 방위는 그 지형의 특수성으로 보아 기동력과 독립성에 유의한다.

(1) 해상방위력을 충실히 강화한다.

(3) 공중 공격기능을 충실히 하여 방공(防空) 역량을 강화한다.

(4) 상륙을 통한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강화한다.

(5) 각종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국산화한다.

(6) 인재를 배양 확보한다.

상기 계획은 1970년 6월 이전에 초안 완성하여 1971년 이전에 국방회의와 내각에 제출 최후의 재가를 얻게 되어 있다. 장차 일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런지 모르겠으나 1967년에 있었던 사또수상의 방미 귀국이후의 담화와 국회에서의 방위문제에 대

(주 3): 1969년 10월 15일자 일본 「독매신문」

한 발언을 분석하여 보면 일본정부는 「자위방위」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총매진할 것이 틀림없다. 지난 11월 방위청 장관 취임 이래 그의 조치는 이를 굳혀 주고 있다.

일본의 항공기에 대한 연구는 1967년 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의 「F4E」 제트 전투기의 사용은 작년 田 방위청 장관 취임 후 결정되었다. 방위청 계획에 의하면 1976년 제4차 방위계획이 완성될 때는 140대의 「F4E」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며 그중 72대는 4개 비행부대로 편성되어 제일선에 배치될 것이고 나머지 32대는 연습기로 사용된다고 한다. (주4) 그리고 방공 경보의 자동화 역시 1976년까지는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정부는 제3차 「방위 5개년 계획」의 (주5) 완성과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받은 후에 야기되는 새로운 정세에 적응키 위하여 금년 8월초 국회는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25만 327명의 육·해·공 자위대 병력을 25만 8천 74명으로 증원한다. 그중 육상자위대는 현재 17만 3천에서 17만 9천으로 증원하고 해상 자위대는 현재의 3만 6천 591명에서 3만 7천 8백 13명으로 증원하고 항공자위대는 현재 4만 7백 3명에서 4만 1천 1백 83명으로 증원한다.

둘째, 현 예비자위관 (장교) 3만을 3만 3천으로 증원한다. (주6)

(주4) : 일본정부 공식발표

(주5) : 제3차 방위 5년 계획

(주6) : 일본 자위관 공식발표

현재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방위문제도 계획중에 있는데 방위의 임무는 일본이 지며 상세한 계획은 방위청이 「제 4차 5개년 방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알기 힘들으나 금년 3월 17일자 「금주일본」(정부에서 발간하는 신전물로서 주간지이다) 와 10월 29일자 「東京新聞」에 나타난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금주일본에 나타난 내용

(가) 7천 내지 9천의 육상 방위대가 혼합부대로 편성되어 배치한다. 고사포, 유도탄, 헤리콕타, 해병대는 따로 배치한다.

(나)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구축함, 소적함과 기타 경찰방위대로 편성되고 항공대는 따로 배치한다.

(다) 항공자위대는 「F 4 포」젯트 전투기 18 내지 20 대를 배치하여 방공임무를 담당케 한다.

(2) 「東京新聞」에 나타난 내용

(가) 미군의 임무와 배치하기 위하여 5천명의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

(나) 항공자위대는 2개의 비행대가 편성되어 대공레-다 대공유도탄 부대와 함께 배치된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한량의 자위대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절충한 나머지 방위성은 다음과 같은 최종안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1) 육상자위대

기지경비와치안유지를 위한 1개연대 약 2천명을 점차로 미군 기지내에 배치한다.

(2) 해상자위대

일개 지방대 분대를 파견하여 보급과 후방지원의 임무를 담당케 한다. 본래 오끼나와 미군기지는 대만해협으로부터 일본해안 및 연안일대의 대잠초계의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해상 자위대로서는 이 임무와 대처할 능력이 없다.

(3) 항공자위대

급거 출동할 수 있는 전투 임무를 진다. 장차 「F104J」 전투기 1개비행대를 배치한다. 대공레다는 5~6년대에 미국의 임무와 대처한다.

위에 오끼나와 방위계획은 결정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기 힘들다. 11월 사또수상과 닉슨 대통령회담에서 오끼나와 기지 반환날자와 장차의 지위가 결정된 후 제4차 방위계획은 재조정될 것이다.

5. 「향토 방위대」의 구상

금년 8월에 일본 자유민주당의 「안보조사회」 회장인 船田中씨가 「오끼나와 반환후 일본의 방위계획」이란 시안을 제출하였다.

(주7) 본 안이 비록 그의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일본 방위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7) 「안보조사회」 심의 결의내용

일본의 각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 시안의 내용은 다음 5개 부분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서론

본 서론에서는 일본이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받게 되면 극동의 평화와 안전 및 일본 자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재정상의 지출도 막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였다.

둘째; 국제정세와 일본의 안전문제 (생략)

셋째; 일본의 방위력문제

일본은 제3차 방위계획 기간중 이미 육상자위대 17만 3천, 예비자위장교 3만명, 해상자위대 함정 약 210척 12만 5천톤, 공군자위대 비행기 약 980대와 자위대 총병력 28만명중 약 25만을 모집 확보하였으나 이 자위대가 국방이라는 중책을 담당할 수 있는지는 국민에게 회의를 준다고 피력하였다.

넷째; 자위대의 정비문제

일본이 오키나와 인수와 더불어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되면 일본 자위대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다. 만일 이 병력과 장비를 미국에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의 제한으로 자위대의 증원이 극히 곤란함을 시사하였다. 장비면에서도 최근 국내에서 비록 제조된다 하지만 주요부분은 아직도 미국, 스웨덴, 스위스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므로 금후에는 무기의 국산화와 더불어 한국, 중국, 월남에 무기수출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일본 방위력의 최대결점은 후방

구내의 지원이 없는 것임을 나타내었고 이의 대응책으로 과거에 있었던 소방단과 청년단의 조직형태로 「향토자위대」 100 만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도 아니며 국정에 적합한 방위조직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것임을 피력하였다.

다섯째, 미·일안보체제문제

만약 일본이 자위대를 증강하면 전쟁력을 억제하기 어렵고 일본이 전쟁을 억제하려면 미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로 명년 6월에 안보조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미·일양국의 협동하에 차차 자위대의 정비와 강화를 추진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6. 결 론

70년대의 아주의 정세를 전망할 때 장기적인 불안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일본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자체의 안전과 아주의 평화 번영을 위하여 계속 미국과 협동하여 자유세계의 정책에 보조를 같이하는 한편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자주방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자주방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헌법의 수정, 국민의 국방의식의 고취, 재야정당에 대한 협상등으로서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로 인하여 자유민주당은 각종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 1976년에는 제 4차 방위계

회의 성공으로 자주방위의 기초가 이룩되기를 희망한다.

내 2
지난 6월 일본외상이 오키나와 반환문제에 대한 교섭차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외무성과 방위청간에 일본 방위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협의를 얻어 대미교섭의 기본방침을 이룩하였다. 당 협의중에 「일본은 미·일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전통무기·국부적인 침략전쟁에 대항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과거의 방침대로 방위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한다. 단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방위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효하고 조용히 간접침략 내지 직접침략에 대항할 방위력을 달성한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하에서 기존의 「전통무기·국부전쟁이하에 대항하는 방위체제」의 달성방침을 유지하면서 직접 또는 핵전쟁의 억제는 미국에 완전히 의뢰할 것이 틀림 없다. 이것은 이미 발표한 「국방백서」 및 자유민주당이 결정한 「미·일안보조약 만료후에도 계속 연장」이라는 몇가지 점에서 그 개요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독립국가인 일본이 「자주방위」를 모색하려는 노력은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진행방향은 다음 각 방면에 주력할 것이다.

(1) 방위력 증강문제

방위력 증강은 최근에 통과한 「방위 2법」대로 추진하여 3군병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편제의 강화와 질의 향상을 기할 것이다. 장비면에서는 현재의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현대화된 장

비를 갖출 것이다.

단 자체제조로 외국의 의뢰감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할 것이다.
예를 들면 「F4E」전투기, 대공유도탄, 방공경계체계자동화의 완성
등 이는 1977년 이전에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2) 국민의 국방의식문제

국민의 국방의식은 일본의 「자위방위」달성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문제이다. 전후 군인의 사회적 신분(지위)이 하락되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국가방위에 대한 책임감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자위대원 소집이 곤란하다는 사실이 이를 가장 잘 증명하
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일본정부는 「국방교육」을 높이고
「국민방위의식」을 양양하여 일본의 「국방」을 재건하려는 단계적
목표달성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병원충실(兵源充實) 문제

일본은 사회와 경제의 번영과 국민들의 국방의식의 희박으로 제
1, 2차 방위계획에서 결정된 자위대 편제·정원을 확보치 못하였
다. 제3차 방위계획에서도 기간내에 정원 목표를 원만히 수행하
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예정된 계획대로 25만의 병력을
확보한다 해도 일단 전쟁이 도발하면 후원부대가 없기 때문에 여
전히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헌법의 제한을
받아 자위대원을 사실상 대량으로 확보할 수 없다.

최근 안보조사회장(鰐田中)이 제시한 「백만향토자위대」조직계획
은 이러한 결점에 대비한 보완방법이 되는것 같다. 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예비병문제도 해결될뿐 아니라 일본 현행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艦회장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장차 「자주국방」의 문제해결은 물론 방위산업이 발달한 후에는 아시아 자유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로 무역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시안(試案)은 일본의 중시 또는 지지를 받아 일본정부가 앞으로 고려할 방안이 되었다.

(4) 개헌문제

개헌은 현 보수정부가 노력하는 목표이다. 1957년 기시내각시대에 이미 「헌법조사회」가 설립되어 1964년에 최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개헌이 되어야 비로소 일본은 정식으로 건군(建軍)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자유민주당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보수정부는 개헌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일본 자민당정부가 「자주방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도의 곤난은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매진할 것이 예상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